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2.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6월 셋째 주 정세동향

2010년 6월 17일 목요일

02 세계경제

헝가리 재정위기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및 향후 과제

03 세계정세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 이란
- 키르기스스탄

04 한국경제

출구전략실행(정책금리인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익 많은 느는데 주가는 저평가... 머잖아 외국인 귀환“
민선 지방자치 5기의 정책과제

06 한국정세

북 “미국, 동북아 패권 유지하려 천안함 이용”
UN 안보리, 북 책임거론 대신 ‘남북 모두 자제’
검찰 ‘천안함 서한’ 참여연대 수사착수
‘4대강 저지’ 범국민행동 시작됐다 - 야당 등 각계 대표 150여명 첫 연석회의
박근혜 전대 불출마 선언 - “젊은 정당으로 변모해야” MB 연설에 심기 불편
김상곤, “무상급식 실시 시기 앞당길 수 있다”

07 노동

총연맹
-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계획 수립
- 김영훈 위원장, ILO 총회 참석

금속노조
- 금속노조 1차 파업(1주차) 연인원 4만7천여명 참가
- 15일 쟁대위, 18일까지 교섭타결 목표... 18일에 7월 투쟁 가닥
- 기아차지부, 대의원 만장일치 쟁발결의
- 대우조선노조, 86% 파업찬성
- 9일, 대우자판 172명 전원 해고 통보
- 현대차지부, 2010년 임금협상 상견례

공공
- 공공운수노조, 26일 4대강 투쟁 총력결합
- 공항공사노조, 민주노총 탈퇴 대의원 대회 진행

전교조, 공무원 노조
- 공무원노조, 6월 8일 단식농성 해제하고 노조탄압 및 대량해고철회를 위한 본부, 지부별 농성 돌입

기타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조합원 징계 건

09 여성

여가부, 재정 15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여성취업자 증가 78%는 단시간근로
[좌담]3040여성들, 정책 보고 표 던졌다

■ 세계경제

1. 헝가리 재정위기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 2010년 6월 15일

- 지난 4월 총선 승리로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헝가리 신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한 바 있음. 의회 2/3 장악이라는 총선에서의 대성공을 바탕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청년민주당(Fidesz) 중심의 중도우파연합은 '성장을 위한 GDP 대비 7%로의 재정적자 확대'를 총선 공약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왔음. 특히 지난 5월 14일 신임 경제부 장관은 경제성장을 위해 유로존 가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사회당 정부가 2006년부터 강력히 추진한 긴축재정정책의 중단을 시사한 바 있음.
- 5월 29일 출범한 헝가리 신정부 측 인사들이 6월 3일과 4일, 이전 정부가 재정적자 수치를 축소하였고 201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가 IMF와 약정한 3.8%보다 높은 7.5%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발언함. 이와 함께 헝가리의 디폴트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헝가리가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 헝가리의 재정상황은 동유럽국가 중에는 분명 가장 열악한 편임.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아직까지 IMF 체제 하에 있는 헝가리는 동유럽국가 가운데 정부부채 비율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총외채 비율이 가장 높아 언제든지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국가임. 2008년 10월 헝가리는 IMF(157억 달러), EU(81억 달러), World Bank(13억 달러) 등으로부터 총 251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함. 헝가리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80%에 육박하고, 민간부문을 비롯한 총외채는 140% 정도로 동유럽국가 가운데 가장 높으며, 총 가계부채에서 외화표시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높은 편임.
- 그러나 헝가리의 재정상황은 남유럽 재정위기사태를 촉발시킨 그리스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현재 헝가리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80%를 하회하고 있는 데 반해, 그리스의 정부부채는 이미 GDP 대비 120%를 초과하였으며, 2011년에는 140%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됨. 또한 헝가리의 재정적자는 2009년 -6.3%에 달하는 실질 GDP 감소에도 불구하고 IMF 프로그램에 의해 GDP 대비 4% 미만으로 유지된 것에 비해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2009년 GDP 대비 14%에 근접하였으며, 2010~11년에도 10% 정도로 예상됨.
- 2009년 극심한 침체기를 경험한 헝가리 경제는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호조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대외자금 조달에서도 다소 여유가 생김. 또한 헝가리는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최근에는 IMF로부터의 자금인출도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부채 중 단기외채의 비율도 매우 낮은 편임.
- 헝가리는 EU 회원국이긴 하나, 아직 유로존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환율조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음.
- 사태 진정을 위한 헝가리 신정부의 수습과 EU 및 IMF 측의 적극적인 설명으로 헝가리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는 점차 진정됨. 헝가리의 신정부는 사태가 불거진 이후 2010년도 재정적자 수준을 GDP 대비 3.8%로 유지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였으며, 재정적자 확대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힘.

2.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및 향후 과제

* 자본시장 연구원 자본시장 위클리 2010-23호

- 각국은 재정구조조정의 중요성과 재정건전화 원칙에 공감.
- 은행의 자본건전선 규제에 관하여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제안할 것을 요청. (최종기준을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
-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은행세에 대해서는 공통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다만 금융시스템 복구에 조달되는 재원을 금융권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 찬성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이고 반대국가는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낼 전망.)
- IMF에서 선진국의 쿼터 중 5%를 신흥국으로 이전한다는 지배구조 개혁방안을 재확인. (서울정상회의 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함.)
- IMF가 논의 중인 대출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 국제정세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이란

-유엔안보리 이란 4차 제재 결의안 채택한 경위
;5월에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나탄즈 핵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우라늄을 농축, 3.5% 농도의 농축 우라늄 2천400kg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게다가 지난 2월부터는 농축 우라늄의 농도 변환 작업에 착수, 3개월여 만에 20% 농도의 농축 우라늄(LEU) 5.7g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농도 90%의 고농축 우라늄(HEU) 1kg이면 핵폭탄 1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의 우려는 증폭.
;현재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향후 이란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경우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미군기지, 남동부 유럽까지도 사거리 안에 포함되는 최악의 염두. 특히 이란이 콤(Qom) 지역에 제2의 핵시설을 건설하는 등 모두 10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증설하겠다고 밝히자 서방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란이 핵무기 능력을 갖추면 이는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서방의 중동전략이 흔들리고 유럽의 나토 국가들까지 직접 위협.
;이란은 그러나 핵 프로그램이 원자력 에너지 확보를 위한 평화적 용도에 따른 것인데다 핵 개발 권리는 고유한 주권임을 주장.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비준국의 경우 평화적 용도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데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유독 NPT 비준국이자 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해 온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문제 삼는 일은 부당하다는 것.
;이란은 5월 자국의 농축우라늄 1천200kg을 터키로 반출한 뒤 실험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연료 120kg으로 돌려받기로 터키, 브라질과 합의함. 그러나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일 뿐이라며 중재 합의안을 사실상 무시했지만 터키와 브라질 등 관련국들은 합의안 이행 여부를 지켜보지도 않고 제재를 가한 것은 이란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

-유엔 제재 실효성 논란
;결의안 표결 결과 찬성 12, 반대 2. 상임이사국은 모두 찬성표 그러나 브라질과 터키는 반대 레바논은 기권.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 은행은 거래 감시.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조치도 연장. 또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 중 거래 금지 대상 품목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조사하거나 해당 물품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받게 되는 '블랙리스트' 대상도 기존 35개에서 75개로 늘어. 미국은 이란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해 제재를 확대시키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강하게 반대해 제재 조치가 완화. 유엔 제재의 효과는 각국의 실행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의 11%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나 이란과 원자력 · 군사부문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러시아가 얼마나 충실히 결의를 이행할지는 미지수.

-유럽, 안보리보다 강력한 제재안
EU는 1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수위를 높인 이란 추가제재를 시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17~18일 열리는 정상회의에 이를 권고하기로. 외교장관회의 권고안을 정상회의에서 승인하면 입법 절차상 차기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 시행. EU제재 초안은 EU 역내 업체들은 석유나 가스 등 이란의 핵심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거나 기술, 장비, 서비스 등을 이전할 수 없도록. 이란의 운송업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

될 것으로 전망. EU 제재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
-이란의 대응
이란은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응수. 이와 동시에 IAEA의 협력수준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이란 의회에서 발의될 예정. 그러나 의회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방안까지 논의할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아. 한편 지난달 브라질과 터키의 중재로 만들어진 핵연료 교환 합의안을 서방 국가들이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

키르기스스탄

현재 상황
;남부 제2의 도시 오쉬와 잘랄라바드 등에서 벌어진 민족 분규가 폭동으로 비화돼 지금까지 170명이 사망하고 1800여명이 부상했다고 보도. 하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매장된 시체만도 200구에 이른다며 사상자 수는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 과도정부가 군 병력을 총동원해 진압에 나서고 통금 등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나 폭도들은 군.경의 무기를 탈취하고 곳곳에서 방화와 살상극이 벌어져. 이미 남부 주요 도시들로 확산된 폭동은 수도 비슈케크로도 번질 기세며, 참혹한 내전까지 우려되는 상황. 우즈베키스탄(우즈베크) 당국은 민족 분쟁을 피해 자국으로 넘어온 우즈베크계 피란민이 14일까지 10만명을 넘어섰으며, 국경을 통과하려고 대기 중인 피란민도 10만명에 이른다고 밝혀.
정치적 배경
;2005년 집권당의 선거부정에 항의하는 민심에 의해 15년 장기집권 중이던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을 축출한 튤립혁명 성공. 이 혁명을 주도한 쿠르만베르크 바키예프가 대통령에 당선. 그러나 지난 4월 바키예프 대통령은 강권통치와 반복된 부정부패로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잃음. 집권 5년 만에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 직면하였고, 결국 대통령이 수도를 탈출하면서 과도정부 수립.
경제난과 겹쳐진 민족갈등
;키르기스스탄의 인구는 530여만 명. 주민의 70%는 키르기스계, 14.5%는 우즈벡계, 8.4%는 러시아계. 남부지역 오쉬는 우즈백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키르기스에서 수도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 우즈벡계가 약 50%에 달함. 소련시절부터 민족갈등이 잦았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950달러(2008년) 정도로 어려운 상황. 마땅한 산업도 자원도 없는 키르기스의 경제토대는 허약하기 이를 데 없으며 러시아 등에 진출한 소위 '3D' 업종의 근로자들이 송금해오는 돈이나 미국에게 기지를 빌려주고 받는 기지임차료가 주요한 재원이 될 정도. 특히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해외로 나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은 오히려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등장.
주요국의 대응
;로자 오툰바예바 대통령 대행은 지난 12일 러시아에 군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 그러나 러시아는 키르기스 국내 문제일 뿐이라며 즉각 거부. 러시아는 다만 13일 공수대대를 보내면서 이는 키르기스에 있는 러시아 군 기지와 장병 및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어. 그러나 러시아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가 14일 평화유지군 파병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러시아 단독으로는 내정에 간섭'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위험하므로 지난 2002년 결성된 러시아판 나토인 CSTO 차원에서 병력을 파견해 치안을 유지할 가능성. 미국 역시 키르기스 정부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면서 아직 사태를 관망.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르기스 내 마나스 기지(수송센터)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음. 키르기스를 안마당으로 생각하는 러시아에만 사태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나름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미국과 유럽은 유럽안보협력조약기구(OSCE) 차원에서의 개입 등 다양한 수습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 한국경제

1. 출구전략실행(정책금리인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출처: 산은경제연구소

- 정책금리의 상승은 기업대출금리에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2008년 2월까지 정책금리는 무담보 1일물 콜금리, 즉 은행간 대출금리였음. 현재는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금리. 콜금리는 운용목표금리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이러한 변화는 콜금리→단기시장금리→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 금리가 부도율에 영향을 끼치는 파급경로에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 ① 금리가 인상할 때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로로서 이 경우 금리인상을 부도율 감소를 초래하나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부도율이 증가. ② 부채의 규모로 인하여 즉각적인 부채조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부채조정이 이루어져 부도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
- 대기업의 경우 즉각적으로 부도율이 상승한 후 7분기 후에는 부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대출금리 1% 상승시 부도율 1.16% 상승.) 소기업의 경우 즉각적으로 부도율이 감소한 후 8분기 후에는 서서히 증가. (대출금리 1% 상승시 부도율 0.43% 상승.) 대기업과 소기업의 충격반응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무건전성 차이에서 비롯됨. 외환위기 이후 영업현금흐름 이상으로 투자에 대한 지출이 컸기 때문.
- 산업별로 보면 ①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부도율이 증가했다가 조정과정을 거치며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이 경우 부도율 상승의 지속기간이 2-3년에 이름.) ② 일정 시차가 지난 후 부도율이 증가하는 경우: 제조업, 도소매업, 운송업. (제조업은 대출금리 1% 상승 시 0.09% 포인트 상승.) 즉 제조업이 받는 충격은 작은데 반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 등 서비스업은 충격을 크게 받음.

2. "기업이익 많이 느는데 주가는 저평가 … 머잖아 외국인 귀환"

* 출처: 중앙일보 2010.06.15

- 올해 한국 기업들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세계 주요국 중 다섯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주가수익비율(PER)은 주요국 주식시장 중 밑에서 넷째일 정도로 저평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일 글로벌 금융정보업체인 톰슨로이터와 신영증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지난해 대비 올해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49.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에 들어 있는 기업들의 올해 경영 실적을 추산한 결과다. 당기순이익 면에서 지난해의 57.1% 증가에 이은 2년 연속 고성장이다. 순이익 증가율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측된 나라는 정보기술(IT) 호조의 혜택을 입을 대만(84.6%)과 엔화 약세 덕에 수출이 크게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일본(74.9%)이었다.
- 갈수록 한국 기업들의 내실이 좋아지고 있지만 저평가는 여전했다. 지난달 20일 기준 PER이 8.7에 불과했다.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PER이 낮은 나라는 러시아(6)와 파키스탄(7.1), 그리고 남유럽 재정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7.4)뿐이었다. 세계 평균은 12, 중국은 11.9, 인도는 15.6이었다.
- 신영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높은데도 PER이 낮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3. 민선 지방자치 5기의 정책과제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6월 9일.)

<지방의 3대 위기>

① 행정, 재정 권한의 취약성

- 지방의 재정적자, 채무 급증. 2005-2008년 지방재정적자는 연평균 33조 4,000억 원으로 8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중앙재정 흑자의 41.7%를 잠식. (지방교육재정 적자도 연평균 30조 6,000억 원에 달해서 지방재정적자와 합치면 중앙재정 흑자의 80.6%를 잠식.) 2009년 지방채무 누적액(지방채 잔액)는 총 25조 5331억 원으로 2008년의 19조 486억 원 대비 34% 증가.
-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40 곳.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도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 이하고, 군은 평균 20% 이하.

② 산업생산 및 기업활동의 지역 간 격차 상존
- 울산, 경남: 전국 대비 1인당 총생산과 개인소득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성장형 지역
- 대전, 서울: 산업생산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개인소득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실속형 지역
- 전남, 부산: 외형은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생산의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지역
- 대구, 충북: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개인소득도 감소.

- 창업과 고용, 혁신역량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발생. 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 시도별 GDP) 비중은 2008년 47.8%였으나 신설법인의 61.1%(2009년), 1,000대 기업의 71.7%, 벤처기업의 63.6%가 수도권에 입지. 1999-2009년 전국취업자가 322만 명 증가했으나 경기도에서만 174만 명이 늘어나 증가분의 54.1·%를 차지. 고부가 산업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법무서비스, 회계와 세무, 광고, 시장조사, 건축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 포함) 사업체의 58.2%, 매출액의 79.6%가 수도권에 집중.

③ 지방의 인구유출 지속 및 인구구조 급변
-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학력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방 인구 중 10-19세 사이의 학생인구가 뚜렷히 감소. 지방의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성이 하락. (65세 노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10.6%인데 비해 군 지역은 20%를 초과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20% 상회. 최고는 경북 의성군(31.5%), 최저는 수원 팔달구(4.3%))

■ 한국정세

●北 "미국, 동북아 패권 유지하려 천안함 이용"
유엔주재 북 대사 "나로호 실패도 우리 어뢰 때문이냐" 반문
신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첫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소설같은 얘기를 엮는데 공모했다"며 천안함 사건은 한국과 미국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사는 이어 "미국은 이 사건을 미군의 오키나와 주둔을 연장시키는 데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무기 판매를 지원하고 군사작전권 이양을 연기하는 데 이용했다"고 말했다.

●UN 안보리, 북 책임거론 대신 '남북 모두 자제'(민중의소리)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남과 북 양쪽의 설명을 모두 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답은 '남북 모두 긴장 고조행위를 자제할 것'이었다.
이 소식을 보도한 로이터통신은 "이 신중한 발언은 누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북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
여기에 더해 안보리 의장은 사실상 남측에 추가 행동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한 셈이다. 그 동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벌임과 동시에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을 밝히는 등 '행동'을 한 쪽은 북측이 아니라 남측이기 때문이다.
꼿꼿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발목 잡힌 정부의 천안함 외교.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검찰 '천안함 서한' 참여연대 수사 착수

● '4대강 저지' 범국민행동 시작됐다 - 야당 등 각계 대표 150여명 첫 연석회의
- 7월 3일 서울광장 대규모 집회 '분수령'
야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15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을 비롯해 최열

환경재단 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경재 목사(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 분야 인사들이 두루 참석했다.

●박근혜 전대 불출마 선언 - "젊은 정당으로 변모해야" MB 연설에 심기 불편

여기에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이 이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전대에 나선다면 계파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도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었다는 관측이다.

●김상곤, "무상급식 실시 시기 앞당길 수 있다"

교사 정당가입 문제는 사실관계와 징계 형평성 등 종합 판단

■ 노동

□총연맹

1.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계획 수립

총연맹은 10일 2010년 상반기 투본 4차회의를 갖고 6월 총력투쟁 계획을 수립했음.

먼저 ▲교사공무원 탄압에 대한 투쟁 전선 구축(투쟁 전담자 배치, 릴레이지지방문, 지역 공대위 설립, 여론화 작업) ▲23일 총력투쟁결의대회 개최 ▲타임오프 분쇄투쟁(야5당과 함께하는 대정치권 사업, 500인 이상 사업장 간담회 및 현장대응 논의, 노동부 타임오프매뉴얼 비판 및 헌법소원, 집행정지 신청) ▲최저임금 5,180원 쟁취(결의대회, 철야농성, 릴레이 농성) 등임.

2. 김영훈 위원장, ILO총회 참석

총연맹 김영훈 위원장은 1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ILO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 할 예정.

□금속노조

1. 금속노조 1차 파업(1주차) 연인원 4만 7천여명 참가

금속노조는 9일과 11일 각각 4시간 파업을 단행했음. 이번 파업은 교섭을 회피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측에게 경고하는 1차 파업임. 11일 파업에는 기업지부 만도지부, 경남, 경주, 구미, 대구, 대전충북, 부산양산, 울산, 인천, 전북, 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 12개 지역지부 소속 1백여개 사업장이 참가함.

1차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15일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차원의 2차 부분파업 첫날 전국적으로 40여개 사업장 1만 여명이 파업에 동참. 2차 부분파업은 17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18일에도 지부별 계획에 따라 지역파업이 펼쳐짐.

2. 15일 쟁대위, 18일까지 교섭타결 목표…18일에 7월투쟁 가닥

금속노조는 15일 8차 중앙쟁대위에서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을 오는 18일 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로 교섭전술을 펼치기로 함, 노조는 14곳 지역지부 마다 17일 오전 10시까지 일제히 지부집단교섭을 열어 노동기본권 요구를 포함한 지부요구안 노사 의견접근을 시도하기로 함. 이는 중앙교섭 타결 뒤 지부집단교섭을 마무리하고 사업장 보충교섭 타결의 수순을 밟았던 기존 교섭전술을 변경한 것임.

이에 따라 17일을 전후, 사업장별 기존 처우 보장에 대한 사업장 규모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17일 지부집단교섭 타결을 이루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도 갈라지게 되는데, 이 때 중앙교섭도 6월 내에 타결 가능한지 여부가 판가름 남.

이와 관련해 18일 쟁대위를 열어 6월 내 임단협 타결 가능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해 가닥을 잡고 7월 투쟁계획

을 잡겠다는 것. 7월 투쟁의 중심은 주로 현대기아 그룹, 두산 등 재벌사를 집중 공략하는 전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임.

3. 기아차지부, 대의원 만장일치 쟁발결의

기아차지부는 14일 소하리공장에서 임시대대를 열어 쟁의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안양지방노동청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함.

기아차 임단협은 11일 7차까지 진행되었지만 사측은 한번도 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임. 지부는 24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함.

4. 대우조선노조, 86% 파업찬성

대우조선노조는 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조합원 7,446명 중 6,159명이 투표에 참여, 5,294명이 찬성표를 던져 86%로 파업을 찬성함.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 3월부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을 시작으로 현재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쟁점은 전임자 임금 관련 노조활동 보장 및 하도급, 신규사업 등임.

5. 9일, 대우자판 172명 전원 해고 통보

대우자동차판매가 대우자판지회 조합원 172명 전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 경영부실로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자동차판매는 9일 380명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럭과 버스 관리영업직을 제외, 자동차 사업부분 717명 53%를 정리한다고 밝혔음.

지회에 따르면 9일 오후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력구조조정 계획 통보' 라는 제목으로 노사협의 요청이 지회에 전달되었고 구체적인 안에는 정비 조합원 1명을 포함, 자택발령중인 172명 지회조합원 전원이 포함되어 있음.

지회는 3박4일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16일 오후 3시 대우자동차판매(주) 본사 앞에서 '이동호 대표이사 퇴진 금속노조 결의대회' 를 진행하고, 17일엔 오후 3시 인천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키로 함.

6. 현대차지부, 2010년 임금협상 상견례

현대차 노사는 14일 울산공장에서 2010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음.

현대차지부는 올해 임금 13만 730원(기본급 8.06%, 정액 100%)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별도 요구안으로는 "성과급 30% 정액, 심야노동 철폐 및 교대제 변경, 월급제 요구, 생산직 집급체계 개선, 진군별 지급되는 수당항목 중 기본급화 및 현실화 요구, 판매시장 질서확립, 사회공헌기금" 을 요구하고 있음.

□공공

1. 공공운수노조, 26일 4대강 투쟁 총력결합

공공운수노조 건준위는 세종로 청사 앞에서 지도부 농성에 돌입했음. 건준위는 4대강사업의 공공부문 훼손과 공공부문 노조탄압의 실상을 알려내는 것을 목표로 25일 까지 열흘간 진행할 예정임.

2. 공항공사노조, 민주노총 탈퇴 대의원 대회 진행

11일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대의원일부가 개최한 임시대대에서 민주노총 탈퇴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음. 집행부도 모르고 있는 사이 장소를 몇 번이나 바꾸며 투표를 진행했으며 가결했는데 공공노조준비위는 ▲공항공사노조 규약 18조는 "대의원대회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3일전에 재공고"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

장소 및 시간을 변경해 대의원의 참석을 방해하고 열린 대의원대회는 효력이 없다. ▲대의원의 참석을 방해한 대의원대회는 무효다. ▲의장 없이 치러진 대의원대회는 무효다 등의 이유를 들며 대대가 무효고 불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함.

□전교조, 공무원노조

1. 공무원노조, 6월8일 단식농성을 해제하고 노조탄압 및 대량해고철회를 위한 본부, 지부별 농성 돌입

공무원노조 소속 16개 지역본부가 노조탄압 중단과 공무원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8일 위원장 단식농성을 해제하고 지역본부 농성에 돌입,

□기타

1.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 징계 건

MBC가 11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참가를 이유로 징계한 노조 조합원 등 41명에 대한 재심을 함. 이근행 본부장은 그대로 해고, 오행운 PD수첩 PD는 1개월 감봉으로 징계수위를 낮춤. 그 외에는 1심 결정이 재심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음.

■ 여성

○ 여가부, 제정 15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6/11, 여성신문)

-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여가부)는 " '여성발전기본법'이 성차별 구조 해소 및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어 전면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 이중 가장 큰 변화는 현행 국무총리실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 그동안 여성계는 청와대의 여성정책 보좌 기능이 약한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음
- 이외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중앙부처 여성정책책임관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지정 ▲국가성평등지수 작성 ▲성차별 금지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에 성차별시정소위 설치▲성인지 예산·성인지 통계·성인지 교육 사항 신설 등.
- 이밖에 각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노력조항 규정과 함께 유연근무제도 확산, 지역사회 돌봄기능 활성화 등의 지원시책이 강화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소송지원의 근거가 명시됨.
- 현행법의 '발전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여성 대상 시책을 유지·강화하는 것. 또한, 각종 성 주류화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성정책 조정 기능 및 이행수단도 강화.
-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성평등' '성차별' 등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됨.

○ 여성취업자 증가 78%는 단시간근로 (6/14, 매일노동신문)

- 이정희 의원, 통계청 '5월 고용동향' 원자료 분석
- 지난 1년간 늘어난 여성취업자 가운데 78%는 단시간노동자. 지난해 5월보다 31만8천명 증가한 여성 취업자 가운데 24만8천명(78%)이 1주일에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라고 밝힘.
- 단시간노동자 비중은 남성에 비해 2배가량 높았음. 5월 단시간노동자 320만명 중 남성은 116만9천명. 단시간노동자 중 남성의 비중은 36.5%, 여성의 비중은 63.5%로 나타남. 근로형태에서 상용직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3.7%(340만명)에 머물렀지만, 임시직 중 여성의 비중은 58.9%(307만6천명)로 남성에 비해 높았음.
- 여성 일자리 증가는 정부의 희망근로사업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따른 효과로 나타남. 여성 일자리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1천명 늘었고, 제조업은 9만4천명, 도매 및 소매업은 5만8천명 늘어나는 데 그침.
- 이정희의원은 "여성들의 안정된 경제활동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

※ 참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6/1)
- 현재 11개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유연근무 참여 직원은 2,570명이며 이중 계약직 단시간 근로 채용이 7개 기관 2,284명, 시차출퇴근 4개 기관 216명, 선택적 근무 1개 기관 42명, 집중근무 1개 기관 28명.

○ **[좌담]3040여성들, 정책 보고 표 던졌다. (여성신문)**

- 좌담 참가자 : 한국매니페스 실천본부 유문종, 명지대 교수 김형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경
- 여성이슈 제기의 의미, 이번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선거였다."

: "보육·복지 이슈를 중점으로 내세운 후보자가 당선됐다는 사실은 민선 5기가 삶의 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경), "권위, 강압, 독선이란 단어가 강조된 남성 중심적 행정운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았다"(유문종)는 것. "여야 상생을 위한 합의점으로 도달하기 쉬운 이슈는 여성일자리, 교육과 보육 등 여성이슈다"(김형준)

: 선거 후 표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의외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고려는 낮았고 4대 강, 무상 급식 등의 정책 이슈가 더 크게 작용. 특히 3040 여성들의 표심 분석 결과가 의미심장.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경우 무상 급식 이슈에, 40대 여성들의 경우 4대 강 이슈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임.(김형준)

- 여성 당선자 수의 증가

: 전체 당선자 수의 18.7%가 여성이고, 기초의회 지역구에선 지난 2006년보다 여성이 두 배나 늘었음. 여성의무공천제 덕이 컸다고 보는데, 여성 광역의원의 수가 크게 늘지 않았음.

- 이번 공약이 각 지방정부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 이번 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 당선자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상황이 역전돼 분배·복지 공약이 60%대, 성장·개발 공약이 40%대를 차지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짐. 정책 방향이 전체적으로 외형적 성장보다는 생활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고, 또 그런 공약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기에 새 지방정부 역시 이런 정책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큼.(유문종)

: 민주당이 올해 초 지방선거를 겨냥해 '서민을 위한 정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교육 노동 등 7대 핵심 생활 분야를 공약화한 '뉴민주당 플랜'을 가동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음.(김은경)

- 여성의제, 성인지적 감수성으로 챙겨야

: 이번 선거만 보더라도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정책으로 가는 전문적이고 치밀한 '여성' 공약은 거의 전무. 따라서 근본적으론 공약 기획 과정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김은경)

<끝>